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3 - 43 호 / 2003년 10월 30일 발간

이라크 인프라 복구사업 동향 및 전망

작성자 : 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bypark@kiep.go.kr, ☎3460-1149]

主要內容

- UN과 세계은행, 그리고 연합국임시행정당국(CPA)은 향후 4년간 이라크 재건을 위해 총 560억 달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인프라 복구에 242억 달러, 치안유지에 50억 달러, 석유부문 정상화에 80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재건비용 조달은 현재 미국의 재정자금 203억 달러와 국제사회의 지원 134억 달러를 합해 총 337억 달러 정도만 예정되어 있어 223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실정임.
- 미국이 추가로 지원하는 203억 달러는 ‘이라크개발기금’에 편입되어 2004년부터는 CPA가 이 자금을 이용하여 재건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CPA 발주사업은 미국기업이 상당 부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됨.
- 마드리드 지원국 회의에서 모금된 자금은 별도의 기금(trust fund)으로 구성되어 UN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조건부 원조(tied loan) 형태로 제공되어 지원국 기업에게 사업이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테러가 계속되면 외국기업들이 복구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되고 참여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이므로, 복구사업의 진척 속도는 이라크 내 치안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임.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 재건사업의 규모

- 지난 10월 초 UN과 세계은행, 그리고 연합국임시행정당국(CPA)은 향후 4년간 이라크 재건을 위해 총 5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UN과 World Bank 공동조사단은 이라크의 14개 분야의 재건을 위해 향후 4년간 36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 양 기구 공동조사단의 재건비용 추정치는 현재까지 발표된 추정치 중 가장 신뢰성이 높고 최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
 - 이 추정치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이라크 재건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이용되었음.
 - 추정된 비용에는 향후 4년간(2004~07년)의 물리적 복구, 기술지원 및 훈련비용 외에 각 분야의 신규투자와 관련된 추가적 관리운영비도 포함되었음.
 - 재건대상 분야는 모두 1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인프라 복구 이외에도 경제제도, 행정 및 사법제도의 개선, 보건 및 교육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프라 복구에 전체의 2/3에 이르는 242억 달러, 보건, 교육 및 고용촉진에 72억 달러, 농업 및 수자원 개발에 30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표 1>참조).
 - 긴급복구를 위해 2004년에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전체 재건비용의 25%에 해당하는 약 93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1> 이라크 재건비용 추정(UN/세계은행 공동조사단)

(단위: 백만 달러)

부 문	2004년	2005~2007년	합 계
행정, 사법	101	212	313
보건, 교육, 고용 촉진	1,880	5,310	7,190
교육	1,005	3,800	4,805
보건	500	1,100	1,600
고용 촉진	375	410	785
인프라	5,836	18,368	24,204
운송 및 통신시설	1,043	2,366	3,409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1,881	4,961	6,842
전력시설	2,377	9,745	12,122
도시 관리	110	303	413
주택 및 토지관리	425	993	1,418
농업, 수자원	1,230	1,797	3,027
농업부문 투자	1,230	1,797	3,027
민간부문 개발	145	476	621
국영기업	30	170	200
금융부문	71	10	81
투자환경	44	296	340
광산업	80	154	234
소 계	9,272	26,317	35,589

□ CPA는 치안유지와 석유부문 개발을 위해 추가로 2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CPA가 추정한 항목은 UN과 세계은행이 포함시키지 않은 부문들로 석유부문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행정업무와 관련된 분야임.
- 항목별로는 치안유지에 50억 달러, 석유부문 정상화에 80억 달러, 환경보호에 35억 달러, 인권보호에 8억 달러, 그 외 문화, 인권, 종교, 자연과학, 스포츠 등에 총 35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들 부문에는 2004년에만 전체 금액의 약 40%에 이르는 82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라크 재건비용이 총 560억 달러로 추정되었지만 실제 소요비용은 향후 이라크의 테러발생과 치안상황, 석유관련 시설과 인프라의 정확한 실태, 정부의 행정능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2. 재건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 이라크 재건비용은 크게 세 가지 방법, 즉 이라크의 자산 혹은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 미국이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음.
 - 현재는 미국의 재정자금 203억 달러와 국제사회의 지원금 134억 달러를 합해 총 337억 달러 정도만 조달이 예정된 상태임.
 - 따라서 전체 재건비용 560억 달러에 비해 223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라크 석유판대대금으로 충당 가능한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표 2> 이라크 재건비용 소요액 및 조달액

(단위: 달러)

재건비용 소요액		재건비용 조달액	
인프라 복구 등 (UN 추정)	360억	미국 재정지원	203억
치안유지 등 (CPA 추정)	200억	국제사회 지원	134억
합계	560억	부족액	223억

- 미국은 당초 이라크 석유수출로 재건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적어도 2004년에는 석유수출대금은 일상적인 정부지출을 충당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수출대금은 통상 세입의 약 90%를 차지하는데 전쟁으로 유전과 정유시설이 일부 파괴되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현재 석유수출은 정상 수준을 훨씬 밀돌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정에 따르면 9월 현재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1일 145만 배럴에 그치고 수출량도 100만 배럴 수준임.
 - 이는 전쟁 전 평균 생산량 230만b/d(배럴/1일)과 수출량 190만b/d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전시에 유정의 피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후 송유관, 정유 및 저유시설 등에 대한 테러로 석유생산과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CPA는 2004년도 석유판매수입을 1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통상적인 행정 및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함.
 - CPA는 2004년 정부예산을 135억 달러로 잡고 있는데, 그중 121억은 통상적인 행정 및 운영비용이고 투자지출은 14억 달러에 불과함.
 - 2004년 중반 경에는 이라크의 석유생산이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테러사태의 악화와 국제유가의 변동이 이라크의 재정상황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올해 지출한 22억 달러 외에 203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인데, 미 의회가 현재 이를 심의 중임.
- 부시 행정부는 지난 9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과 재건을 위해 약 87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이라크 재건비용 203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음.
 - 미 의회는 이라크 재건비용 203억 달러 중 약 100억 달러를 무상원조(grant)가 아닌 차관(loan)의 형태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음.
 - 현재 미국은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라크 재건비

용 지출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부시의 대이라크 정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10월 24일 종결된 국제 지원국회의에서 World Bank, IMF 등 국제 기구와 70여개국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약 134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음.
 - 미국은 이라크 재건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10월 16일 UN 안보리 결의안 1511호를 통과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10월 23~24일 마드리드에서 국제 지원국회가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지원하기로 밝힌 총액은 약 13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주요국의 지원계획 내역은 <표 3>과 같음.

<표 3> 각국의 이라크 지원 계획 (마드리드 지원국 회의 결과)

(단위: 달러)

국가	지원 총액	참고
세계은행	30~50억	차관
IMF	25~42.5억	차관, 2004년에는 8.5억
일본	50억	15억(무상, 2004)+35억(차관, 2005~07)
EU	15억	2004년에는 8.12억
캐나다	2.3억	대부분 이미 약속된 금액임
한국	2.0억	2003년에 0.6억 지원
중국	0.24억	
인도	0.3억	2004년
스위스	0.15억	
사우디아라비아	15억	10억(차관)+5억(수출신용)
UAE	0.2~0.25억	무상
쿠웨이트	5억	이미 10억 지원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Oct. 26. 2003.

- 이 금액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액 45억 달러의 3배에 이르는 규모

인데, 이는 재건 지원을 발판으로 삼아 막대한 석유자원을 가진 이라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의 결과로 평가됨.

- 하지만 지원액 규모는 미국이 당초 희망한 액수에는 못 미치는데, 이는 미국의 이라크 통치에 불만을 가진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아랍국가들이 지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임.
- 또한 국제기구나 각 국가가 많은 부분을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 힘에 따라 무상원조 규모는 30~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3. 인프라 부문별 복구사업 규모

-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 1990~91년 걸프전, UN경제제재 및 올해의 전쟁 등으로 이라크의 인프라 상황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970년대 말 이라크는 1인당 소득이 4,000달러를 넘을 정도로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경제수준도 높았으며, 인프라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음.
 - 하지만 20년 이상의 전쟁과 독재, 국제적 고립으로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인프라가 크게 낙후된 상태임.
 - 많은 국민이 전기, 수도와 같은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징수체계도 와해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조달할 수 없음.
 - 특히 수돗물의 오염, 하수 및 폐기물의 방치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인프라의 복구 및 개선을 위해 UN과 세계은행은 향후 4년간 총 24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인프라 세부항목별 복구사업 규

모는 <표 4>와 같음.

- 전력시설의 복구와 확충은 치안유지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데, 사업 규모도 총 121억 달러로 가장 큼.
 - 이라크의 발전용량은 현재 약 3,300MW로 추정되는데, 조사단은 이를 2007년까지 8,760M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를 위해 발전시설 복구 및 확충에 86억 달러, 배전 부문에 24억 달러, 송전 부문에 11억 달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복구 및 개선에는 총 68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임.
 - 세부 항목별로는 1991년 수준으로의 복구에 41억 달러, 상수도 시설 확충에 12억 달러, 하수처리 시설 확충에 8억 달러, 폐기물 관리의 개선에 1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운송시설의 복구 및 개선에는 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도로 및 교량부문에 7억 달러, 공항 등 항공부문에 3억 달러, 항만 복구에 2억 달러, 철도에 7억 달러, 대중교통을 포함한 기타 부문 개선에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통신시설 복구 및 개선에는 14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현재 이라크의 전화보급률(인구 100명 당 전화 대수)은 5.2%인데, 2007년까지 이를 13%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전쟁 전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3억 달러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전화망 가설을 위해서는 9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주거개선 및 도시 관리에는 총 18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주택 보급 및 수리에 14억 달러, 도시환경 개선에 4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임.

<표 4> 이라크의 인프라 부문별 복구사업 규모(2004~07)

(단위: 억 달러)

부 문	세부 항목	금 액
전력*	발전 배전 송전 변전소	121 86 24 11 11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1991년 이전 수준 회복 상수도시설 확충 하수처리 확충 기타	68 40 12 8 8
운송	도로 및 교량 공항 및 운항체계 항만 철도 대중교통 및 기타	20 7 3 2 7 1
통신	긴급복구 기본 전화망 확충 1단계 장거리 기간망 기타	14 3 9 1 1
주거 및 도시 관리	주택 건설 도시 관리	18 14 4
합계		242

* 세부항목의 합계가 전력부문 총액을 초과하는 이유는 일부 재원이 석유식량교 환프로그램에 의해 조달되기 때문임.

4. 인프라 복구사업 동향 및 전망

가. 복구사업 동향

- 종전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이라크 전후복구는 전시에 파괴된 전력, 수도, 도로망, 석유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위주로 진행되었음.
 - 복구 자금은 대부분 미국의 재정자금(22억 달러)으로 조달되었으며 복구 사업은 미국의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과 미 국방부의 발주 형태로 이루어졌음.
 - 10월 현재까지 USAID가 발주한 10건과 국방부가 발주한 4건의 사업의 주계약자는 모두 미국기업임.
 - USAID가 발주한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인프라 긴급복구사업은 벡텔(Bechtel)이 수주하였는데, 하청업체는 대부분 이라크 현지기업임.
 - 하청기업을 국적별로 보면 이라크 84개, 미국 10개, 영국 3개, 쿠웨이트 5개, 사우디 4개, 스위스 1개, 키프로스 1개사.

나. 향후 전망

- 미국의 추가 지원금 203억 달러는 이라크개발기금(Development Fund for Iraq)으로 편입되어 2004년부터는 CPA가 이 자금을 이용하여 재건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됨.
 - CPA가 발주하는 사업은 현재와 같이 미국기업이 상당 부분 수주하고 그 하청사업은 이라크 현지 기업이 대부분 맡을 것으로 예상됨.
- 마드리드 지원국회의에서 모금된 자금은 별도의 기금(trust fund)으로 구성되어 UN이 공동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음.
 - 개별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부분 조건부 원조(tied loan) 형태로 제공되어 자국기업에게 사업이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World Bank와 IMF 등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차관 사업은 경쟁 입찰 형태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하청사업권은 현지 실업문제 해결과 민심안정을 위해 이라크 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구사업의 진행속도는 이라크의 치안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임.
- 최근 UN은 물론이고 적십자와 같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NGO도 테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후 복구는 매우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
- 테러가 계속되면 외국기업들이 복구사업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높으며, 참여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이므로 그만큼 복구가 지연될 것임.
- 수도나 전력시설에 대한 파괴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복구되어도 다시 테러 공격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높음.
- 복구자금이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라크 원유생산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2005년 이후에는 자금부족으로 복구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